

출범 후 4년간 수사력 논란 공수처...대통령 구속으로 존재감

“내란수괴 구속수사” 피력...‘수사권·관할 위반’ 비판 방어 체포집행 관련 ‘대응미숙’ 논란...“검경이 큰 역할”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정 대통령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5일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오동은 공수처장은 초기부터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만 해도 공수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이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어서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아직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하지만 헌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성사했고, 이번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범원에 소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팽’·‘관할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이런 비판을 방어하고 적법 수사를 인정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면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자 5시간 반 만에 중단했는데, 당시

경호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준비나 대응계획 없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에는 경찰과 협의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법적 판단 미비를 지적받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사실은 누락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검찰에서 전달 받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상 경찰이 도맡았던 만큼 공수처에 공을 모두 돌리기가 어렵고 검경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만약 추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나면 검찰과 경찰에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尹, 현직이론 처음

전직 대통령 4명 구속...모두 특별사면 받아 2-4년 수형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헌정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8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8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198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다음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착수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이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으로 부터 건설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4

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 28일 만에 구속으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2월 31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함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어서 체포 후 바로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12월 22일 특별 사면되면서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그는 헌정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소환 9일 만에 3월 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2018년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라 석방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촉

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속 이후 어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그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해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간인 1천736일(4년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따라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도 고려됐다.

전·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구속 현황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시기 1995년 11월 1일	1995년 12월 3일	2009년 4월 30일	2017년 3월 21일	2018년 3월 14일	2025년 1월 15일
조사장소 대검찰청 청사 (7시간 조사)	검찰 소환 불응 구속 후 안양교도소 수감 및 검찰 조사	대검찰청 청사 (약 13시간 조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약 21시간 20분 조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약 21시간 조사)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약 10시간 40분 조사)
구속 1995년 11월 16일	1995년 12월 3일		2017년 3월 31일	2018년 3월 22일	2025년 1월 19일
주요 혐의 반란·내란중요 임무중사상권침해 미수죄·뇌물죄	반란·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권침해·미수죄·뇌물죄	박연치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노 대통령 서거로 수사 중단	특기범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관리방해 등 16개 혐의	특기범죄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직권남용 관리방해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 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명령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임동 더현대 쇼핑타운 인접도로변 최고요지
2층건물 대지144㎡ 급매4억3,600
식당, 카페, 편의점 최적

임동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선점하세요)

임동 5거리 2,300세대 아파트대로변
더현대쇼핑타운 생활권(500여미터)
임대가격으로 매수가능 시세50%급처분
10층 431.48㎡ 급매가4억3,000
승강기1, 주차40대
학원, 병의원, 하늘정원식당 등 최적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